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이후 농민들의 의식 변화

서재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학)

1. 문제제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농업 부문의 토지소유 제도이다. 도시노동자의 경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생산양식과 생산관계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농민들의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농민들은 땅을 직접 소유하느냐 협동농장의 노동자로 일하느냐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에게 땅의 소유욕은 어느 시대, 어느 제도에서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땅에 대한 농민들의 소유 욕구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적으로 개혁·개방하는 것도 농민들의 비공식적 토지 사유화 경향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그것이 국가에 의하여 묵인되고 공식화된 경우가 많다.

베트남의 1986년의 도이모이 정책이 가장 근접한 예이다. 베트남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도이모이를 채택하기 이전에 베트남, 특히 남부 베트남 농민들은 이미 도이모이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프랑스와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형성된 개인주의와 암시장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78년에 큰 홍수 피해로 남부가 기아선상을 벗어날 수가 없을 때 인민들이 비공식 부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든 상황 하에서는 협동농장이 유지될 수도 없었다.¹⁾ 이러한 상황을 맞은 베트남 공산당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토론하였고, 사유화를 향한 인민들의 모티베이션이 확인된 이상 사회주의 사회 내의 사적 부문을 양성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공산화 이후의 사회주의적 양식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 되었고, 숙고 끝에 베트남 공산당이 내린 결정이 1986년 시작된 도이모이 정책이었다. 가족과 가족이념이 강한 사회에서 가족제 생산양식과 유교적 노동윤리가 만나면서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감당하기 힘든 자유제에의 모티베이션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 모티베이션의 힘이 지향하는 방향의 출로를 열어 주자는 것이 시장경제의 도입이다.²⁾

중국의 개혁개방도 농업 부문에서 시작되었고 농민들의 주도적 역할이 정책방향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그 자체는 등소평의 판단에 의하여 시작되었지만 가족농으로 특징지어지는 포산도호제(包產到戶制)를 도입한 것이라든지 토지사용권을 사유화하는 조치, 생산물을 자유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의 농민들의 불법적인 주도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국가가 묵인하면서 정책화된 것이다.³⁾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던 국가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1) 전경수, 『전경수의 베트남 일기』(서울 : 통나무, 1993), 309~312쪽.

2) 위의 책, 44~45쪽.

주도하는 방식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농업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허용해 준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어떤가? 북한의 경우도 농민들의 성향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농민들의 의식은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화의 역사가 다르고 당국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북한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집단에 대한 사상교육과 사회 통제를 철저히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의하여 농민으로서 본질적인 성향이 말살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북한 농민들의 의식은 현재 북한의 정책 속에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축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 초기의 토지개혁과 이후의 농업협동화의 과정의 긴 터널을 거치면서 체험한 의식이며, 이득과 손해를 저울질하면서 만들어진 역사적 의식이다.

북한 농민들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그 이후의 북한의 정책 속에서 농민들의 인식과 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북한 농민들의 역사인식과 현재에 대한 평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자료를 사용하였다. 면접자 중에는 온성군 양정사업소 검열지도원을 했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 관리계층의 견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협동화 과정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에 대한 자료는 북한연구소에서 발행한 월남자들의 증언과 김일성의 연설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김일성의 연설은 매우 절제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농민들의 정서를 연설문 속에서 드러내어 주고 있다. 농민들의 토지소유 욕구에 대한 사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련에

3) Daniel Kelliher, *Peasant Power in China : The Era of Rural Reform, 1979 ~ 1989*(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92), p. 233.

서 농업집단화에 대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소련 사례에 대한 검토는 농업집단화에 대한 소련 농민들의 인식과 저항의 정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에 진주한 소련 군정 당국이 1946년 북한에서 토지문제를 다루는 데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2. 소련에서 농업집단화와 농민들의 저항

소련의 농업협동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소련 농민들의 농업협동화에 대한 완강하고 폭력적인 저항을 잘 드러내어 보여 준다. 브루칸은 소련의 농업집단화는 1917년 러시아혁명 전후에 소련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세력으로 성장한 농민계급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것이 러시아의 저항적 농민이었으며 그들은 혁명을 통하여 매우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소련은 농업집단화를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농민을 경제적·행정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1920년대 말 이후 소련 국가권력에게는 농민을 통제하고 신흥 도시의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담보해 주는 것이 1920년대 소련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볼셰비키당에게는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호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의 농산물이 필수불가결했다. 이에 따라서 시도된 것이 강제적인 농업집단화라는 거대한 드라마였다.⁴⁾

4) Silviu Brucan, *World Socialism at the Crossroads, An Insider's View*, 이선희 역, 『기रो에 선 사회주의』(서울: 푸른산, 1990), 64쪽.

농업집단화는 농민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농정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의도되어진 것이다. 경제적인 효율성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러한 까닭에 농업의 집단화의 성공 여부는 경제적 효율성은 무시되고 몇 퍼센트의 농민을 동원에 참여시키느냐에 달려 있었다.⁵⁾

소련에서 농업협동화는 1927년 12월 15차 당대회에서 농업협동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1928~1930년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소련 농민들은 처음에는 중앙정부에 호소문을 보내는 등의 평화적 방법으로 집단화를 저지하고자 했으나 소용이 없자 폭력적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농업집단화는 농민과 농민의 문화와 농민의 생활 방식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었기 농민들의 저항이 매우 완강하였다. 소련 농민들은 농업집단화를 세상의 종언이라고 생각하였다. 3년여에 진행된 농업협동화는 하나의 내전의 과정을 거쳤다. 소련의 농업협동화는 20세기에서 가장 악명 높은 대규모의 탄압이었으며 농민과 국가 간의 내전이였다. 협동화에 대한 농민의 저항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소련이 경험한 가장 폭력적인 저항이었다.⁶⁾

농민들의 저항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련 당국이 동원한 가장 중요한 행동대는 도시의 기간요원인 기능 노동자, 내전 제대군인, 특별기동부대 (shock workers), 공장의 지도자, 공산당원으로 구성된 25,000인 운동대 (25,000er campaign)였다.⁷⁾ 25,000인들은 농촌의 기존 당-국가 관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동원되었던 것이다.

5) Don Van Atta, "The USSR as a 'Weak State': Agrarian Origins of Resistance to Perestroika", *World Politics*, Vol. XLII, No. 1(1989), p. 133.

6) Lynne Viola, *Peasant Rebels Under Stalin: Collectivization and the Culture of Peasant Resistanc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4.

7) Lynne Viola, *The Best Sons of the Fatherland: Workers in the Vanguard of Soviet Collectiviza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농민들의 저항에 대하여 소련 정부는 농민의 모든 제도를 파괴하는 방식의 대응을 하였다. 가계, 농민회, 농민들이 모이는 장소인 정미소, 시장, 교회, 심지어 민속휴일마저 파괴하였다. 농촌의 엘리트들은 연금되었고, 목사들도 체포되었으며, 국가의 협동화 운동 요원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농촌 지식인들은 박해를 당했다. 부농들과 힘이 있는 농민들은 쿨락(kulak)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체포되어 추방을 당했다.⁸⁾

소련 농민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은 이 당시의 농민들이 행한 테러 건수에 대한 소련의 통계가 잘 보여 준다. 농업 협동화에 저항하여 일어난 테러는 1928년에 1,027건, 1929년에 9,093건, 1930년에 13,794건이다.⁹⁾ 가장 격렬했던 1930년의 경우 테러의 내용별로 보면 살인이 1,198건, 살인미수와 폭행이 5,720, 방화가 6,324건, 기타가 552건이다.¹⁰⁾ 테러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집단적인 소요 건수를 보아서도 농민들의 저항의 격렬성을 알 수 있다. 농민들의 소요는 1928년에 709건, 1929년에 1,307건, 1930년에 13,754건이다.¹¹⁾

1930년에 농업협동화의 조치가 완료된 이후 소련 농민들은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탄압이 매우 엄했기 때문이다. 1933년 초에 농촌에서 농민들의 저항을 분쇄하는 새로운 통제기구를 만들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추방하고 투옥하였다.¹²⁾

이러한 상황 하에서 농민들은 공개적인 저항은 피하고 일상생활형의 저항으로 바꾸었다. 일터에 결근하기, 일부러 게으름부리기, 일부러 일

8) Lynne Viola, *Peasant Rebels Under Stalin : Collectivization and the Culture of Peasant Resistance*, p. vii.

9) *Ibid.*, p. 103.

10) *Ibid.*, p. 105.

11) *Ibid.*, p. 136.

12) Shila Fitzpatrick, *Stalin's Peasants : Resistance & Survival in the Russian Villiage after Collectivization*(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p. 76~77.

을 서투르게 하기, 흠치기, 농장물건 파괴하기, 불지르기 등의 방식을 사용하였다.¹³⁾

소련의 농민들은 집단농 또는 콜호즈 제도를 제2의 농노제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콜호즈에 편입되는 것이 강제적이며 옛 영주의 땅과 같은 콜호즈 내에서는 농민들은 남의 땅(콜호즈를 의미)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수를 받지 못하고 강제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노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는 마을을 이탈할 수 없다. 이동의 자유가 없다. 이것은 콜호즈 농장원은 농노와 마찬가지로 이동시민의 범주에 속함을 의미한다.

또한 콜호즈 농장원들 자신도 일을 할 때는 농노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된다. 작업의 질이 좋지 못하며 마지못해 하며 작업장에는 가능하면 늦게 나갔다가 가능하면 빨리 빠져나간다. 작업과정에서도 감독자가 지시를 해야 시작하며 감시를 할 때에만 움직인다. 콜호즈 내에서 흠칠 것이 있으면 뭐든지 흠쳐 가며, 콜호즈가 농장원들의 것이라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감독관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속이고, 멍청한 척하면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을 기피한다. 감독관들이 흔히 지적하는 대로 수동적인 심리를 자주 보인다.¹⁴⁾

소련의 농업집단화에 대한 농민들의 격렬한 저항은 북한의 사회주의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련 군정이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치명적인 역사의 오점이 북한에 재현되는 것을 우려하여 처음부터 농업집단화를 하지 않고 토지개혁이라는 방식을 채택한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13) Lynne Viola, *Peasant Rebels Under Stalin : Collectivization and the Culture of Peasant Resistance*, p. 205.

14) Shila Fitzpatrick, *Stalin's Peasants : Resistance & Survival in the Russian Villiage after Collectivization*, p. 129.

수 있다. 소련의 농업집단화가 스탈린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소련에서 매우 폭력적인 내전으로 비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탈린은 북한에서는 조심스런 행보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45년 11월말 당시 로마넨코 소련 주둔군 민정관은 북한에서 농업협동화가 아닌 토지개혁 방식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서 농민들의 강력한 토지소유 욕구 등의 이유를 들어 토지개혁에 의한 지주층의 축출, 농민층의 지지획득이 필요하다는 논지의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다고 한다.¹⁵⁾ 즉, 토지개혁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소련에서 쿨락(kulak)이라고 불리던 지주계급을 먼저 청산하고 나서 나중에 적절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농업집단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지주와 농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토지개혁은 지주는 반대해도 토지를 분배받게 되는 농민은 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¹⁶⁾

3. 북한에서 토지개혁 당시의 농민들의 의식

현재 북한 농민들의 토지소유에 대한 의식은 1946년 토지개혁의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토지개혁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분배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당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구성된

15)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서울 : 역사비평사, 2000), 123쪽.

16) 북한의 1946년 3월의 토지개혁이 농업협동화가 아닌 토지개혁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배경에 대하여 김성보는 당시 사회주의 지식인들의 인민민주주의 토지개혁론에 입각한 과도기 농업개혁론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위의 책, 150쪽.

지 한 달 만에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한 달 만에 토지개혁의 실행을 완료하였다. 북한의 토지개혁의 원칙과 방법은 1946년 3월 5일에 공포된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과 동년 3월 7일에 공포된 ‘토지개혁법령에 대한 세칙’에 나타났다. 토지개혁의 기본취지는 농민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지주계급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토지분배의 기본원칙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경자유전(耕者有田)이었다. 5정보 이상의 땅을 가진 자는 지주로 규정되어 몰수되었다.¹⁷⁾

토지개혁이 끝났을 때 전국적인 토지의 몰수 내역을 보면 총 1,000,325정보가 몰수되었는데 이는 북한 총 경지면적인 1,982,431정보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이었다. 이 중 일본 국가 및 일본인과 종교단체의 토지는 겨우 4%였다. 나머지 약 96%는 북한의 지주 및 민족반역자, 소작주는 자의 토지였다. 이들은 총 405,603가구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북한의 총 농가호수인 1,121,295호의 약 40%였다. 열 농가 중 최소한 네 농가는 토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당했음을 알 수 있다. 몰수대상 가구수가 실로 엄청나다.¹⁸⁾

그들은 토지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매우 완강한 저항을 하였다. 소련 주둔군 및 북조선 임시위원회의 사법기관에서 입수한 각 지역의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주집단으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었다. 평양시에서는 토지개혁 발표 이틀 후인 3월 7일 밤에 공산당위원회 건물에 수류탄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는 도인민위원장이 학생집회에서 토지개혁 법령을 해설하였지만 150명의 학생 중 단 한 명도 이 법령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원도 금화에서는 ‘금화반공·반소 토지개혁 반대 선언문 사건’이 있었다.¹⁹⁾

17)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 기원과 원인』(서울 : 나남출판, 1996), 제4장 참조.

18) 위의 책, 196쪽.

토지개혁을 통하여 피해를 본 사람의 수가 매우 많다는 사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땅을 몰수당한 지주들의 경우는 북한을 떠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조치를 당하였다. 지주들은 축력, 농기구, 주택의 일체의 건물 및 대지까지 완전하게 몰수당하였다.²⁰⁾ 지주는 기존의 거주지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게 하였다. 타군으로 이주하게 하였던 것이다. 박명림에 의하면 이것은 38선을 의식한 의도적인 반동 남하정책이었던 것이다. 소련군은 북한으로부터 계속되는 탈출과 남하를 의식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몰수당한 지주 약 3만 가구(29,683)의 13%인 3,911가구만 타군으로 이주하였고 나머지 87%의 지주는 월남하였다. 이것은 북한 당국이 의도했던 방향이었다. 남하를 방임하고 유도한 것은 위협한 저항계급을 북한에서 축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들이 계속하여 북한에 남아 있다는 것은 저항계급의 잔존을 의미하였고 그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계속적인 도전 요소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을 피하여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은 100만 명 정도라고 한다.²¹⁾ 토지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은 상당수 북한을 탈출하고 없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 토지개혁은 지주계급을 축출하여 청산하며 동시에 토지를 분배받은 '인민대중'으로부터 정권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개혁의 최대의 수혜층은 토지를 몰수당하지 않고 분배받은 영세농민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들 계층은 김일성의 권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세력이 되었으며 권력의 정당성의 기초가 되었다.

19)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156 ~ 159쪽.

20) 당시 피해를 당하여 월남한 사람들의 농지몰수 지주 강제이주에 대한 증언은 북한연구소 편,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서울: 북한연구소, 1990), 302 ~ 303쪽.

21) 위의 책, 200쪽, 356쪽.

4. 북한 농업협동화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

1) 농업협동화 추진 배경

토지개혁으로 농민들이 토지를 얻어 잠시 기뻐했던 농민들은 농업협동화를 통하여 다시 토지를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토지소유권을 국가에 빼앗긴 것이다. 농업협동화가 추진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김일성의 권력공고화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업협동화에 대한 논의는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동유럽이나 소련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농업협동화가 필요하다는 논지였다. 물론 학자들의 논의는 당내 정치세력들의 논의를 대변하는 것이었다.²²⁾ 전쟁 기간 동안에도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당내의 주류와 비주류 간의 입장 차이가 컸다. 비주류는 남북통일문제가 남아 있는 한 북한만의 농업협동화를 반대하며 소농경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주류는 북한 지역의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협동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결국 정전 직후인 1953년 8월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개조 단계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농업협동화 방침이 실린 결정서가 채택되었다.²³⁾ 이 결정서에 담긴 내용은 농민적 토지소유를 존중하되 1954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서 주류의 입장이 관철된 셈이다. 또한 토지의 사적 소

22) 정순정, “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협동조합운동”, 『소비조합』 5월호(1948), 15쪽; 김한주, “인민민주주의와 농업문제: 동남구라파 제국을 중심으로”, 『경제의 제문제』 2호(1949), 45쪽.

2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288~289쪽 참조.

유 보존원칙은 협동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유지되었으나 협동화 완료 다음해인 1959년도에 전국노동협동조합대회가 개최되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 초안」이 결정되면서, 토지의 사적 소유의 원칙이 폐기되고 협동조합적 소유로 획일화되었다.²⁴⁾

1954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급진적인 농업협동화 방침을 결정하면서 주류의 입장은 더욱 강화되었으나 비주류의 반론은 계속되었으며 두 입장간의 대립은 결국 1956년의 8월중과사건으로 치달았다.

김일성의 1954년 3월 11일 지시와 1954년 11월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하여 농업협동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1958년 8월까지 완수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논쟁의 과정을 볼 때 농업협동화의 동기를 김일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6·25전쟁으로 인한 농업기반의 파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정치적 의도에서 찾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접근법이 될 것이다.

6·25전쟁을 자신의 정적을 제거한 기회로 활용한 김일성으로서는 토지의 국유화를 위한 기회로도 활용한 셈이다. 당시는 또한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사회주의권에 수정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추곡수매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이는 등 사회적으로도 동요가 일고 있었던 상황에서 김일성은 권력의 공고화를 위하여 토지국유화를 서둘렀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김일성이 농업을 사회주의적 협동화의 길로 이끌었던 이유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유를 드는 경향이 있다. 가령, 강정구는 북한이 농업협동화를 추진한 배경에 대하여 “전쟁의 결과 농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이 파괴되고 노동력 또한 엄청

24) 위의 책, 334쪽.

난 인명 피해로 인하여 감소된 객관적 상황 하에서 영락된 농민생활을 올려세우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길은 서로간에 협동하는 길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²⁵⁾ 전쟁 동안 농촌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개인 경리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강정구는 전쟁 이후의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농민들이 ‘자원해서’ 이루어진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강정구는 북한 문건²⁶⁾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시작된 농업협동화는 자원성의 원칙 하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²⁷⁾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먼 분석이다. 북한 농촌의 동태성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나온 평가라기보다는 북한의 공식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다. 김일성은 농업협동화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농촌에서 모자라는 로력과 축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농업을 협동화해야 하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계속된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촌에서는 로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농촌의 많은 청년과 장년들이 군대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농촌 로력의 대다수는 부녀자와 늙은이들입니다. 농촌에서는 지금 축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로력이 부족하여 농사를 잘 짓지 못하며 축력이 없는 사람은 마무리 농사를 잘하려 해도 잘 할 수 없습니다.²⁸⁾

6·25전쟁을 통하여 축력이나 관개수로 등이 파괴된 것은 사실이나

-
- 25) 강정구, “북한 사회구조의 개혁”, 강정구 책임편집, 『북한의 사회』(서울: 을유문화사, 1990), 59~60쪽.
 - 26)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제2권, 1979년판(서울: 돌베개, 1989), 35~36쪽.
 - 27) 위의 책, 60쪽.
 - 28) 김일성, “농촌경리의 금후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에 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4. 11. 3.), 『김일성 저작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129쪽.

이것은 사후적인 설명이 된 것이다. 농업협동화는 6·25전쟁 이전부터 계획되었으며 6·25전쟁 기간 동안에도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1946년의 토지개혁도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것도 농업협동화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작업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처음부터 국유화 또는 집단농장화를 실시하지 못했던 것은 농민들의 반발 때문이며,²⁹⁾ 소련에서의 사례에서 배운 교훈 때문임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북한에서 농업협동화에 대한 이해는 북한 농민들의 계급적 속성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농업협동화를 단행한 정치적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아래의 김일성 담화문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에서는 소련의 쿨락(kulak)에 해당하는 ‘부농’이 성장하여 북한 정권과 대립되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농업협동화를 통하여 부농화하여 사회주의 국가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을 분쇄하고자 하였다. 김일성은 북한 농촌에서 토지개혁 이후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성장하고 있었던 농민들의 세력화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인식을 한 증거를 다음의 연설문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농촌에서 부농들이 부단히 산생되고 있는 데 대해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토지개혁을 잘 실시했습니다. 토지개혁 후 아직까지 큰 문제로 될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농촌에서 점차 부농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농화하는 사람들은 비록 토지개혁의 혜택을 입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경리가 점차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남조선 반동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시적 후퇴 시기에 반동에 가담한 자들을 분석해 보면 그 중에는 토지개혁의 혜택을 입은 자들과 심지어 지주

29) 북한연구소 엮음,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651쪽.

앞에서 머슴살이하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농촌에서 토지개혁 후 부농화하면서 남조선 반동층의 영향과 미 제국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촌에서 부농이 산생되고 이들에게 주는 반동작 영향이 있는 조건 하에서 아직 로골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농촌에서 계급투쟁은 있으며 또 그것이 앞으로 점차 침체화될 수도 있습니다.³⁰⁾

둘째, 김일성이 농업협동화를 단행해야 했던 직접적인 계기는 북한 농민들이 국가에서 시행한 양곡수매사업을 거부한 사건이다. 북한은 토지개혁 이후 그리고 전쟁 이후 국가적인 양곡수매사업을 1954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당시 북한은 양곡이 유일한 부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양곡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누가 권력을 장악하느냐와 마찬가지로였다. 양곡을 국가가 소유해야 국가가 노동자와 농민, 인텔리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농민들이 부농화되어 기득권이 강화되면 농민이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지배계급이 권력을 독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이 “국가적인 양곡수매사업은 올해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잘하는 것은 전후 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선언한 데서 드러나듯이 전후 복구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서도 양곡수매사업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¹⁾

양곡수매사업은 국가가 수매한 양곡을 가지고 양곡의 시장가격을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상인들의 투기적인 폭리현상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 양곡수매사업은 여유 양곡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쌀값이 오르

30) 김일성, “농촌경리의 급후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에 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4. 11. 3.), 127쪽.

31)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30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4년 8월 23일), 『김일성 저작집』, 제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83쪽.

는 기회를 리용하여 폭리를 얻거나 빈농민들에게 고리대를 놓아 리득을 보는 것과 같은 착취적 현상을 막으며 나아가서 일부 농민들이 부농화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³²⁾

그런데 양곡수매사업에 대하여 농민들은 국가에 싼값으로 팔기보다는 개인 상인들에게 비싸게 파는 것을 선호하고 양곡수매사업에 호응하지 않았다. 또한 김일성이 수매양곡에 대한 적절한 보상보다는 애국심에 호소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일성은 나라 사정을 생각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개인 상인에게 팔지 말고 국가에 수매하도록 요구하였다.

우리 농민들은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자기들이 지은 곡식을 억울하게 빼앗긴 원한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의무수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을 잘 설득하고 교양하여 그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면 의무수매제를 하지 않고도 여유 량곡을 얼마든지 수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루 빠 성원들은 농민들에게 쌀을 국가에 수매시키지 않고 개인 장사군들에게 팔면 나라 사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해설하여 주어야 합니다.³³⁾

토지의 개인소유제 하에서는 양곡수매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국가의 이익과 농민들의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싼값에 몰수하다시피 쌀을 수매하고자 하지만 농민들의 최대 관심은 최대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직 적지 않은 농민들의 사상상태는 자원적으로 량곡수매사업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일부 농민들은 세금을 바치기 위하여 부득이 가을에 쌀을 얼마간에 팔지만 대부분은 가을에 팔지 않고 봄에

32) 위의 글, 83쪽.

33) 위의 글, 85~86쪽.

쌀값이 오른 다음에 팔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³⁴⁾

또한 정부가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조치가 부당한 측면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황해남도 용연군 인민위원회 재정부장을 지낸 이종구 옹의 증언³⁵⁾에 의하면 1954년도의 양곡수매 사업은 농민들에게 부당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농가별로 여유 양곡을 조사한 후 거의 대부분을 수매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김일성의 연설이 지적한 대로 양곡수매사업에 자원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다. 빼앗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쌀값에 쌀을 수매하고자 하는 북한 정권에 대하여 농민들이 수매를 거부한 것이다. 아래의 김일성의 지적에서 보는 바대로 양곡수매사업이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곡수매사업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김일성은 농민들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당 및 정권기관 간부들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량곡을 여유가 있는 농민들에게서 계획적으로 수매할 데 대하여 한 두 번 만 강조하지 않았습시다. ... 그런데 당 및 정권기관 일꾼들은 사전에 아무런 사상동원사업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두운 밤에 주먹을 내밀듯이 농민들에게 내리먹이는 식으로 량곡수매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 및 정권기관 일꾼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한 결과 량곡수매사업에서 편향을 범하게 되었으며 높은 값을 주고도 량곡을 제대로 수매할 수 없었습니다.³⁶⁾

34) 위의 글, 84쪽.

35) 2000년 2월 10일 인터뷰;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299쪽 주 69에서 재인용.

36) 김일성, “농촌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상

김일성은 또한 농촌에 계급적 원수들이 숨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도 주장하였다. 농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도 주장하였다. 자기가 생산한 쌀을 가능한 한 높은 가격을 받겠다는 김일성의 지적에서 본다면 농민들의 의식은 자본주의에서 농민들의 의식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농민들을 김일성은 “계급적 원수, 간첩, 암해분자”라고 규정하였다.

이번 양곡수매사업을 통하여 농촌에 계급적 원수들이 적지 않게 숨어 있으며 그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는 것이 날날이 드러났습니다. ... 적지 않은 농촌당원들과 농민들 속에서는 현 단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혁명의 성격과 우리 혁명의 최종 목적 등을 똑똑히 인식하지 못하고 혁명의 리익보다는 몇 가마니의 자기 쌀을 더 귀중히 여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입니다. 당과 혁명의 리익보다 자기의 쌀 몇 가마니를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려운 때에 당과 혁명의 리익을 배반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³⁷⁾

농촌에서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려야 합니다. 간첩, 파괴암해분자들과의 투쟁에서 우리 당의 관대 정책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은 동요분자들에게 관대하라는 것이지 결코 적들에게까지 관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과 동요분자들을 옳게 가려 극소수의 적들은 무자비하게 치고 동요분자들은 설복하고 교양하여 그들이 적의 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³⁸⁾

1954년도 양곡수매사업에 대한 저항은 농업협동화회의 저항이 아니라 개인 농민들의 국가에 대한 저항 사례로서 북한 정권이 농업협동화를

무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5. 2. 2.), 『김일성 저작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16~217쪽.

37) 위의 글, 216~219쪽.

38) 위의 글, 221쪽.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다.³⁹⁾

이처럼 김일성이 농업협동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 문제도 있었지만 정치적 문제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토지구유화는 농민들이 생산한 양곡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개혁이 사회세력으로서의 지주계급을 청산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농업협동화는 사회세력으로서의 농민계급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농업협동화가 추진된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의 하나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 논문은 이해한다.

질라스의 시각에 따르면 북한의 지배층은 자신들 이외의 소유계급이 있는 한 권력이 공고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는 식량공급에 사보타주가 일어날 수 있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가재정 확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농민은 정권에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일성은 농업협동화를 실시함으로써 농민을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복종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이 농민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인 것이다.⁴⁰⁾ 소련이 농업집단화를 했던 배경과 매우 유사하다.

2) 농업협동화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

토지소유욕이 강했던 북한의 농민들이 농업협동화에 대하여 찬성할 이유가 없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재량으로 생산물을 처분하는 것

39)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323쪽.

40) Djilas, *The New Class :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New York : Praeger Publisher, 1957), p. 56.

이 농민들의 숙원이었다면 농민의 손에서 도로 땅을 빼앗아 가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좌절임에 틀림없다. 농민들의 반발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북한은 농업협동화를 원칙적으로 ‘레닌적 자원성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주장하였다.

당은 농업협동화 운동을 지도하는 데서 레닌적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켰으며 실지 경험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알려 주는 기초 위에서 이 운동을 대중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⁴¹⁾

그러나 실제로는 계급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시행하였음을 김일성의 담화가 잘 시사하고 있다. 김일성은 북한에서 부농이 장성하고 있으며 그들의 저항이 없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소상품경제 형태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적이나 많으나 간에 농민들의 계급분화가 진행되며 부농이 발생하며 장성하고 있다. 이들은 계절적 혹은 고정적으로 고용로력을 채용하며 곡물시장을 통해서와 현금 및 각종 현물에 의한 은폐된 고리대적 방법과 농기구, 축력 등의 리용대가를 고물로 받는 방법으로써 빈농민들을 착취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 북반부에서 토지개혁이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 밑에서 실시된 것만큼 부농의 경제적 기초는 대단히 미약하다. 특히 농촌에서의 협동조합의 급격한 장성에 따라 부농들의 착취 대상은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그들로 하여금 자진하여 농업협동조합에 망라되게 할 것이며 점차 근로농민들로 개조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농촌에서 아무러한 계급투쟁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는 없으며 적들의 일정한 저항과의 투쟁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⁴²⁾

41) 김일성,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전국농업조합대회에서 한 보고, 1959. 1. 5.), 『김일성 저작집』, 제13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6쪽.

농업협동화에 대하여 농민들 사이에 많은 반발이 있었으며 그것에 대하여 ‘치열한 계급투쟁’이 있었음을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치열한 계급적 투쟁이라는 말속에는 자기 소유의 땅을 국가가 빼앗아 간다는 것에 대한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표출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 이행하는 역사적 행정은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합니다. 쓰팔린이 말한 바와 같이 죽어 가는 계급이 자발적으로 역사 무대에서 물러간 일은 일찌기 없었으며 죽어 가는 부르주아지가 자체의 생존을 고수하기 위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도 역사에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개혁의 결과 청산된 지주계급과 연속자본가, 친일분자, 민족반역자 기타 반동분자들은 과거의 자기 처지를 회복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자기의 착취자의 본성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⁴³⁾

실제로 계급투쟁과 저항이 완강하였다. 주로 부농과 중농들의 저항이 더 컸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토지의 개인소유를 포기하기 어려운 농민들의 속성 때문이었다. 황해남도 신천군의 한 빈농 과부는 토지개혁 때 받은 토지에 대한 애착 때문에 초기에 조합 가입을 주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토지개혁 때 남편과 함께 패말을 쫓고 기빠하던 땅, 영원히 자기소유로 습관되어 온 그 땅, 그 땅이 비록 남의 땅보다 유독 좋대서가 아니지만 그 땅을 내놓을 마음은 도저히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42) 김일성,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1955. 4.), 『김일성 저작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236쪽.

43) 김일성, “당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5. 4. 1.), 『김일성 저작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249쪽.

가 조합 가입에 주저한 또 다른 이유는 조합 경영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남남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⁴⁴⁾

저항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우선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합 가입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농업협동화를 하면서도 농민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고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편법 행위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은 농업협동화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저항적이었으며 가능하면 협동화 과정에 개인 이익을 확보하려는 최후의 안간힘을 다한 분위기였음을 김일성의 연설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농민들 속에서는 중농의 기분을 반영하는 편향들, 즉 경제적 토대가 비교적 튼튼한 농민들끼리만 조합을 묶으려 하면서 빈농민들을 받아 주지 않는 경향, 규정 이상으로 터밭을 남겨 두며 협동조합에 들여놓은 역축 및 농기구 등의 값을 지나치게 비싸게 치루는 것과 같은 부정적 현상들도 나타났다.⁴⁵⁾

실제로 협동조합에 대한 방화, 축역에 대한 독살, 루머 유포 등과 같은 이른바 ‘파괴암해’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본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작성하였으며 러시아로 번역되어 소련 외무성에 보고된 문건에 의하면 평안남도에서 다음과 같은 농업협동화에 대한 적대행동들이 있었다. 강동군 맥전 농업협동조합에서는 황소의 사료에 독이 풀려 5마리의 소가 죽는 등 가축들이 반복적으로 궤멸당하고, 제방이 파손되기도 하였다. 평안남도에서 농업협동조합에서의 화재가 4개월간 97회

44) 조근원, “새날을 위한 애국렬사 가족들의 첫봉화”,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 위원회, 『농업협동화운동의 승리』,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84쪽.

45) 위의 글, 333쪽.

발생하였다. 양덕군 용평 협동조합에서는 화재 때 27마리의 양이 죽었다.⁴⁶⁾ 농업협동화가 공식적으로 전개되기 이전인 1953년 말부터 북한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역축 도살, 방매 현상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전쟁 시기 동안 금지되었던 가축도살을 재허용한 1953년 11월 내각결정 이후 평안북도 박천군에서는 축우도살 금지 제도 폐지 이후 1953년 말까지 소 300여 두가 도살되었다. 또한 역축을 조합에 출자하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 시장에 팔아 버린 평안남도 문덕, 순안의 사례, 큰소를 작은 소와 바꾸어 출자한 양강도 지역의 사례 등이 북한의 공식문헌에 보고되었다.⁴⁷⁾

1953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북한의 민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소련의 협동화 당시에 소련 농민들이 국유화되는 가축들을 모조리 잡아서 먹었던 행태들이 북한에서도 재현된 것이다.

김일성의 아래 연설에서도 그런 현상을 시사하여 주고 있으며 김일성은 그 정도가 ‘악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계급적 원수들은 당정책을 비방하며 농업협동화 운동을 반대하는 반동적 요언들을 퍼뜨리며 공동재산을 해치고 생산을 파탄시키기 위한 해독행위를 하는 등 우리의 농업협동조합들을 내부와 외부로부터 마사버리려고 날뛰었습니다. 특히 농업협동화가 완성되어가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확고하여짐에 따라 반혁명 분자들의 준동과 파괴해행위는 더욱 악랄하게 되었

46) “조선로동당의 농업협동화 정책과 평남도에서의 그의 승리적 실현”, 『력사논문집(사회주의 건설 편)』(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 397쪽;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333쪽, 주 20에서 재인용.

47) 정동철, “농업협동화는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 향상시켰다”,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 위원회, 『농업협동화 운동의 승리』,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196쪽;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330~331쪽에서 재인용.

습니다.⁴⁸⁾

농업협동화에 반대하는 반대파들도 엄하게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은 반혁명파의 투쟁을 일시적 깜빠니아로가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투쟁으로 진행하였다. 당은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행 죄과들에 기초하여 악질 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며 자기의 죄과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들은 관대히 처리하는 방침을 정확히 실시하였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계급적 원칙에서 적아를 똑바로 식별하여 계급적 원수들을 명확히 갈라내는 것이었다.⁴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일부의 자료가 있다. 황해도 배천 지방, 개성지구 일대와 황해도 일부, 특히 황해도 배천군이 특별히 반발이 심하였다고 한다. 이 지역은 8·15해방 당시 38선 이남에 위치하였다가 6·25전쟁 이후 북한 지역에 편입된 지역이라는 특징도 있다.⁵⁰⁾ 황해도에서는 출신성분이 불량하고 집단농장 정책을 반대하는 자들을 1개 군에서 15~20명씩 검거하여 농장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할 것을 비밀리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 지시에 따라 배천군에서는 권중집을 비롯하여 17명이, 연안군에서는 15명, 청단군에서는 20명, 웅진군에서 8명, 강령군에서 9명이 체포되었고 이들이 각 지방 학교 운동장에서 소위 인민재판을 열어 모조리 총살형에 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공포분위기 조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 지역에서는 집단농장화 정책에 대한 심한 반발을 보였다. 북한의 농업협동화

48) 김일성,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전국농업조합대회에서 한 보고, 1959. 1. 5.), 23쪽.

49)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조선로동당력사교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393쪽.

50) 김남식, “북한의 공산화 과정과 계급노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엮음, 『북한 공산화 과정연구』(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173쪽.

는 1953년에 시작되어 1958년에 종결되었으니 시작한 지 5년 만이다.⁵¹⁾ 토지개혁이 불과 1달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린 셈이다.

농민들간에는 농업협동화가 완료된 후에도 개인 토지소유의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음의 김일성 연설문에서 엿볼 수 있다. 소소유주의가 당시 북한 주민의 보편적인 정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아직도 낡은 사회에서 넘겨받은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속에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고 그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공산주의 사업을 힘차게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남아 있는 개인 리기주의와 소소유자적 근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개인리기주의는 우리의 전진운동에 커다란 장애로 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인 집단적 소유를 튼튼히 하여야 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집단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개인 리기주의를 없애지 않고는 이 모든 발전과정을 촉진할 수 없습니다.⁵²⁾

북한의 농업협동화에 대한 저항의 정도가 소련보다는 강하지 않았지만 북한에도 저항이 많았다는 것은 김일성의 연설, 북한의 공식문헌, 그리고 월남자들의 증언에서 잘 드러나 있다. 농민들로서는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1946년의 토지개혁을 통하여 토지를 사유화한 경험이 있었던 북한 농민들로서는 1958년의 토지국유화 조치가 매우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조치였음에 틀림없다. 농업협동화 이후에도

51) 북한연구소,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 652쪽.

52) 김일성,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전국농업조합대회에서 한 보고, 1959. 1. 5.), 52~53쪽.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역사적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다. 특히 1946년의 토지개혁과 1958년의 농업협동화는 북한 농민들에게 아직도 비교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 농민들에게 분명한 사실판단의 근거로 되고 있다. 북한 농촌에서 전개된 농민들의 태도와 행위양식이 이를 증명해 준다. 최근 탈북한 북한 농민들의 증언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5. 농업협동화 이후 북한 농민들의 의식

북한 농민들은 1946년 토지개혁의 기억과 1958년 농업협동화의 기억을 생생히 가지고 있다. 토지개혁은 농민에게 토지소유를 인정해 준 것인데 반하여 농업협동화는 토지를 국유화한 조치인 것이라고 양자를 비교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농민들이 농업협동화에 대한 정치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북한의 농민들은 3월 5일 토지개혁은 똑같이 땅을 나누어 주었으며, 없는 사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준 좋은 정책이었다고 좋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1958년 협동화에 대하여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모두 힘을 합쳐 성과를 거두자, 협동화하면 힘이 약한 사람도 살 수 있다, 약한 사람도 골고루 먹게 되어 있다”고 선전했기 때문에 좋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평가에 기인하여 북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다음의 몇 가지로 특징지어진다.

1) 토지소유 욕구

농민들의 전통적인 특징은 토지에 대한 소유 욕구이다. 따라서 현재 농업협동화 체제에 대하여 지지를 할 수 없는 문화적·역사적 전통을 이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에 대하여 반대의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북한 농민들은 현재의 체제 실패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 못 먹고 못 사는 문제의 책임이 토지제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누구나 농업협동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농화해야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협동화 가지고는 안돼, 개인농해야 해”라고 거칠게 말한다고 한다. 김정일에 대한 반감이 묻어 있는 감정이기도 하다. 농촌지역에서의 이러한 생각은 농민, 간부 모두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래서 협동화는 잘못된 정책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농민들은 개인농을 회구하고 있다. 개인 땅을 주면 좋아할 것이며, 땅을 옛날처럼 나누어 주면 잘 살 것이라고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 농민들은 땅을 개인에게 분배해 주면 땅을 깨끗이 다듬어 알뜰하게 일할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모두 부지런히 일할 것이기 때문에 거지되는 사람 없을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⁵³⁾

북한에서 협동농장의 농작물은 시들해도 개인 텃밭에서 자라는 농작물은 매우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북한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관찰이다. 개인 소유에 대한 북한 농민의 애착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그러한 욕구가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은 출근해서 출근도장이 나 찍고는 시간을 허비하거나 농장의 물건 훔치는 일을 한다고 한다.⁵⁴⁾

53) 임복신(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 10 귀순) 증언.

54) 최○실(39세, 함북 온성군 주원 로동자구 농장원)의 증언.

2) 불평등 의식

북한 농민들은 농업협동화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이유의 하나는 간부들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한다. 협동화는 간부를 공짜로 먹이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북한의 농업협동화는 소련 협동농장을 모방하여 당시의 읍, 면, 리의 행정단위에서 중간 단위인 면을 없애고 3~4개의 리를 통합하여 하나의 리로 재편하여 하나의 협동농장으로 편성함으로써 넓은 협동농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관리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1개 리에 1개 협동농장이 있는데 1개 협동농장은 1천명 규모의 농장원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간부들이 100여 명은 된다고 한다. 10명의 농장원당 1명의 간부가 있는 셈이다.⁵⁵⁾ 이들은 모두 유급직 간부들로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다. 북한 농민들은 이들을 모두 놓고 먹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한다. 협동화 이후 간부들이 너무 많으며 작업 지시나 주고 하는 일이 없다고 인식한다. 인민들에게 차려 주는 것 없고 간부들만 잘 산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북한 농민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놓고 먹는 간부들의 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5) 북한 리단위 농촌의 주요 간부들은 행정조직에서는 관리위원장, 기사장(제1대리인), 부위원장 2인(생산부위원장, 관리부위원장), 계획지도원, 생산지도원, 축산지도원, 관개지도원, 토지지도원, 기술지도원 1~2명, 재정부기과, 노동과 지도원; 리당위원회에서는 리당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 적위대장, 농근맹위원장, 청년동맹비서, 선전원, 작업반마다의 세포비서 등을 포함한다.

3) 계급의식

국가사회주의의 아이러니는 계급을 청산하기는커녕 농민 개인들의 사회적 존재를 하나의 계급의 성원으로서 더욱 결정론적으로 구조화시켰다는 점이다.⁵⁶⁾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땅에 붙박혀 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 성원으로서의 정체감이 매우 강하다. 전체주의 체제에서 농민은 비록 개별적으로 원자화되어 있지만 농민계급이라는 범주의 한 성원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즉 자신들은 농민계급이라고 자기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농민들은 모두 똑같은 집, 같은 작업장, 같은 작업조건, 같은 생활환경에서 살고 있다. 동일은 자극이 주어지면 동일하게 반응하는 동질성의 집단으로 형성되었다.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한다. 그들은 너무나 동질적인 계급인 것이다.⁵⁷⁾

결국 농민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의식화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나 똑같은 조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극이 주어지면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마치 조직화되어 있어서 조직에 의해서 동원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등소평 시대 중국의 사례에서 잘 보았다.⁵⁸⁾

북한은 농민들이같은 계급으로서 계급의식을 가질 것을 우려해서 종파주의를 뿌리뽑자는 사상투쟁을 많이 한다. 무엇보다도 언행에 대한 감시가 엄격하다. 당위원회, 안전부, 보위부가 각각 정보원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 농민들은 평생을 같이 사는 이웃에게도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없다. 사람들이 몽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큰일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평소에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56) Daniel Kelliher, *Peasant Power in China : The Era of Rural Reform, 1979~1989*, p. 247.

57) *Ibid.*, p. 31.

58) *Ibid.* 참조.

러한 이유 때문에 서로 감정이 통해도 뭉치지 못한다. 대화하다가 민감한 부분이 나오면 회피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사회 형편이 악화되어도 소요, 폭동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계급형성의 두 번째 특징은 간부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서를 북한의 간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너무 강력한 통제 때문에 통제요원 개인에 대해서도 원한이 많다. 최근에 간부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사회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일이니 몸조심한다고 한다. 의식 수준이 낮은 간부들이나 백성 위에 군림한다고 한다. 의식이 짙은 사람들은 대부분 저 사회가 꼭 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이 죽거나 권력의 중심이 파괴되면 망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 가서 과연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우려한다고 한다.

농민이 다른 계급과의 계급적 차이를 느끼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농민 자녀는 대대로 농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계급과의 분명한 차이를 느낀다. 여성이 도시로 시집을 갈 수 있지만 농촌인이 도시로 이주하지 못한다. 농민의 자녀는 대학 진학도 안 되며 군입대도 불허하며 농촌에서의 이동을 금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이후 농촌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여자를 따라가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나 시행이 잘 안 되고 폐지되었다. 농민들은 농촌에 구속되어 있는 셈이다.

농촌에 대한 문화적 투자도 매우 열악하다. 농촌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농촌을 싫어하며 농민들을 천하게 본다. 농촌에 살겠다는 사람도 없다. 도시에서 강제추방된 사람이나 농촌으로 온다. 농촌 인원 확보를 위해서 농촌으로 도시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농촌에 이주시킨다. 이러한 농촌에 대한 억압적 정책 때문에 농민들마저 농촌을 싫어하게 되어 농촌의 인구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⁵⁹⁾

결국 농민들은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많다. 다른 계급과는 다르다는 일

정한 차이를 느낀다. 특히 간부들과의 관계에서 계급적 차이를 많이 느낀다고 한다. 계급이라고 짚지는 않지만 계급적 차이를 느낀다고 한다. 간부들은 핵심계급이고 농민들은 일반 계급이라고 느끼고 있다. 간부들은 조직사업만 한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먹여 살린다고 느끼고 있으며, 간부들에게 대놓고는 말하지는 않아도 간부들을 싫어한다. 농민들은 간부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소련의 농민들이 소련의 집단농을 제2의 농노제라고 비아냥거린다고 위에서 지적하였다. 이○철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농촌도 이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철은 오히려 북한은 봉건제 이전의 노예제와 유사하다고 강조하였다. 농민들이 토지에 불박혀 있으며 개인이 마음대로 거주이전을 할 수가 없으며 무거운 세금에 허덕인다고 지적했다.⁶⁰⁾

4) 일상생활형의 저항

북한 농민들이 일상생활형의 저항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소련 농민의 경우와 유사하다. 농민들의 가장 흔한 불만 표출 방식은 농장일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한다. 또한 열심히 일하지 않는 태업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스코트(James Scott)가 말레이시아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일상생활형의 저항이라고 개념화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⁶¹⁾ 농민들이 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모내기, 김매기, 추수 등 중요한 일마다 학생들을 동원해서 일한다.

59) 이○철(35세, 함북 온성군 양정사업소 검열지도원, 2000. 11. 귀순)의 증언.

60) 위의 증언.

61) James Scott, *Weapons of the Weak : Everyday Forms of Resistance*(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5).

농장원 통제 방식은 엄격하지만 개인 농민들을 제대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협동농장은 작업반과 분조로 나뉘어지는데 분조는 대략 15~20명 단위이다. 대개 1개 분조 단위로 작업을 하지만 작업내용에 따라서는 농장원 몇 명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를 일일이 할 수 없고 작업결과에 대한 통제를 한다. 넓은 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조장도 작업통제를 잘 못한다고 한다. 분조장 자체도 의욕이 없고 통제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이러한 틈을 활용하여 농민들은 태업이 매우 일상적이라고 한다.

6. 식량난 이후 농민들의 의식 변화

협동농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은 식량난 이후 심화되었으며, 특히 식량난으로 농민들에 대한 착취가 심화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는 곧 배급체제라고 생각하는 데 배급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가 말로 되어 있고 글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 내용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교양만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데 반하여, 아는 사람은 사회주의는 무너져야 한다, 경제관리 운영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말은 못하고 “하다 못해 농사만이라도 풀어 놔서 개인업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한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농민들이 착취의 주

대상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다른 산업 부문은 착취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생산물에 대한 분배가 협동농장 농민, 즉 생산자를 중심으로 분배가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군량미 중심으로 분배가 이루어진다. 또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식량이 들어오면 일상적인 규칙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상부에서 분배에 관한 지령이 내려온다고 한다. 특히 생산물이 군량미라는 명목으로 거두어 가는 데 농민 몫의 분배량은 매우 작아졌다고 한다. 생산의욕이 떨어지고, 분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졌다.⁶²⁾

농민들에 대한 착취에서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된 것이 인민군대에 대한 돼지고기 지원이다. 현재 농민들을 가장 크게 구속한 것 중의 하나라고 한다. 농가 호당 1년에 100kg짜리 돼지 1마리를 군대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1980년대 말경부터 인민군대 고기 지원 제도가 생겼다고 한다. 이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식량분배 몫에서 해당액의 식량을 제외한다고 한다. 돼지 1마리에 1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 식량 500kg 정도에 해당하며 이것은 1사람 1년 식량분(결국 340kg)보다 많다. 이것 때문에 농민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협동농장 분배결산서는 국가의무 수매곡(군량미), 농민식량, 1 : 1 사료(돼지 1마리에 대한 사료), 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군량미가 최우선적으로 공제되고 나머지가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인데, 돼지고기를 납품하지 못할 경우 1 : 1 사료를 공제해 간다는 것이다.

결국, 농민들이 입쌀은 구경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냉이 꾸어 먹고 입쌀로 상환하기도 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돼지 대신에 닭, 염소, 토끼 등으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안 내고 넘어 갈 수는 없다. 행정단위는 물론 당적으로 총화를 하기 때문이다. 당간부들은 과제 달성 여부에 따라

62) 이○철(35세, 함북 은성군 양정사업소 검열지도원, 2000. 11. 귀순)의 증언.

서 자리가 걸렸다.

농민들에 대한 착취가 심화됨에 따라 농민들은 분노해 있다. 농민들의 생활이 노동자나 사무원보다 어렵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장사라도 할 수 있지만 농민들은 장사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공장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직장을 안 나가도 되지만 농민들은 토지가 살아 있기 때문에 농장으로 내몰려야 한다고 한다. 일부 농민 중 머리가 깬 사람은 돼기밭을 개간하여 생활이 나은 편이지만 국가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한다.⁶³⁾

농민 중에는 이제는 김정일이 정치 잘못한다고 말하는 사람 많다. 김정일이 현지지도 한 번 하면 며칠 동안 TV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다. “저것이 며칠이나 계속 나오나. 쌀이나 주지”라고 말하곤 한다. 김일성 정치할 때는 안 그랬는데 김정일 정치한 이후 형편없다고 말하곤 한다고 한다. 가족이 해체되고 빈집이 많다. 현실이 이러하니까 이제는 말한다고 한다. 간부와 군대 군관들도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⁶⁴⁾

7. 토지정리사업과 북한 당국의 정책 방향

북한 당국의 최근 정책은 북한 농민들의 토지소유 욕구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현실은 매우 답답하다. 최근 북한이 전국적인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정리사업이 그러한 정책방

63) 위의 증언.

64) 김○숙(35세, 함북 청진시 청암구역 연진동 현진협동농장, 농장원)의 증언.

향 중의 하나이다.

김정일이 1998년 5월 최전방 시찰을 위해 강원도 창도군을 지나던 중 거미줄 같은 뚝기논밭을 보고 현지에서 즉시 ‘관계 부문 일꾼 협의회’를 조직하여 강원도 토지정리를 지시했으며, 그 해 12월에 다시 강원도 고산군을 찾아 강원도 토지정리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한다.⁶⁵⁾ 처음에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평안북도를 거쳐서, 황해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토지정리사업은 작고 꼬불꼬불한 논두렁을 없애면서 800평, 1,000평, 1,500평 단위로 논밭의 단위당 규격을 확대하는 것이다. 강원도에서 토지정리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을 때에는 어느 것이 정리한 토지이고 어느 것이 정리하지 않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는데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하여 소극성이 극복되고 사업이 통이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⁶⁶⁾는 『로동신문』의 지적을 두고 볼 때 토지정리사업은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전국적인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협동농장원들이 부수입 차원에서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던 소규모 뚝기밭들을 몰수하여 협동농장에 합병하였다. 결국 토지정리사업의 목적은 1차적으로 농지의 확장에 있었지만 부수적으로 당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이나 협동농장의 소규모 자투리땅을 찾아 내어 몰수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이 개간하여 경작하던 땅들의 경계를 허물고 대규모의 협동농장으로 흡수시켜 버린 것이다.

북한은 토지정리사업을 통하여 농지 확장과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개인 및 협동농장원들의 부업을 통한 잉여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차단하는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경제난이 심

65) 『연합뉴스』, 1999년 4월 12일.

66) 『로동신문』, 2000년 5월 8일.

화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개인주의, 자본주의의 맹아들을 일소하게 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토지정리사업의 가장 중요한 효과일 수도 있다.

토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북한 당국은 점차 그 의미를 확대하게 되었다. 광복 후 토지개혁을 통하여 지주의 소유로 있던 토지를 농민의 소유로 만들었지만 토지의 구조와 면모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토지정리사업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가령 지금까지 토지정리는 기껏해야 폭탄구덩이나 메우고 물길을 짜는 식으로 부침땅이 생긴 대로 진행되었으나, 현재의 토지정리사업은 봉건시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뽕기논밭들을 큰 규모의 구역 포전으로 만들어 토지의 구조와 면모를 일신시켰으며⁶⁷⁾ 이는 토지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⁸⁾

북한은 토지정리사업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의 사상의식 통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은 토지정리사업이 지주계급과 그 후손들의 땅문서를 역사의 휴지로 만들고 북한 농민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며 사회주의 계급 진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사상적 순결성을 보장하는 중대한 정치적 사업으로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날 북한 농촌에는 오랜 세월 사적 토지소유관계가 지배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거미줄같이 늘어진 논두렁들과 올망졸망한 뽕기논밭들이 많았는데 김정일이 뽕기논밭들에서 봉건적 토지소유 잔재를 발견하고 토지정리사업을 낡은 사회의 유물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하나의 혁명으로 내세웠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⁶⁹⁾

북한은 땅의 면모는 토지소유관계의 반영이며 나라의 모습을 보여 주

67) 위의 신문.

68) “사회주의적 토지문제 해결의 위대한 역사”, 『로동신문』, 2001년 3월 3일.

69) 위의 신문.

는 중요한 징표라고 보고 있다. 땅의 면모와 구조를 보면 해당 사회의 토지소유관계를 가늠할 수 있고 국가의 위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토지정리사업의 의미를 1946년의 토지개혁과 1958년의 농업협동화에 이은 소유관계 변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토지개혁으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가 무너지고 농업협동화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가 수립되었으나 낡은 토지 면모를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도 살릴 수 없으며 농민들의 머리 속에서 소유자적 근성을 완전히 뿌리뽑을 수가 없다.⁷⁰⁾

북한은 최근의 토지정리사업에 대한 논평에서 오히려 봉건적 자본주의적 토지소유를 비롯한 사적 토지소유 제도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을 낳는 근원이며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를 저해하는 계 동기가 된다고 보았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 제도 하에서만 농민대중의 생산 의욕을 높이고 전 사회적·전 국가적 힘을 집중하여 토지건설과 보호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며 농촌정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생산물이 농민들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물질적 복리증진에 참담하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⁷¹⁾

북한의 농업생산성이 낮은 원인의 하나를 개인소유제가 아닌 토지의 국유제에 있다는 것이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은 그 반대이다. 특히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원인이 토지사유제에 있다고까지 주장하였다. 북한은 오늘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여러 나라들에서는 토지의 사유화로 인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있으며 식량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

70) 위의 신문.

71) 위의 신문.

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으며 1천만 헥타르의 토지가 황폐화되고 있는 것도 자연적·생태적 요인보다도 사회의 정치경제적 요인인 토지에 대한 사적·자본주의적 소유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북한은 “농민대중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길은 계급해방의 길, 인간해방의 길이라면 토지사유화의 길은 계급적 예측의 길, 인신적 구속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⁷²⁾

8. 맺음말

지금까지 논의에서 밝혀진 대로 북한 농민은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며 과거의 개인 토지소유 제도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협동농장제도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 농민들이 현재에 대한 이같은 인식은 과거 경험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재 집단농에 대한 무관심과 일상생활형의 저항은 이러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북한 농민들은 도급제 또는 개인농을 선호하고 있다. 협동농장은 농민들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생산성이 오르지 않아서 오늘날 식량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 농민의 소원은 자기 땅을 가지는 것이

72) 위의 신문.

다. 개인에게 땅을 주면 농업생산성이 올라가서 식량난이 해소된다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협동농장제를 개혁하지 않고 있다. 사유제 쪽으로 개혁하기보다는 ‘토지정리사업’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원형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농민들의 의식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농민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이 농업 부문에서 사유화를 추진한 배경과 비교해 보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농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어서 중앙의 정치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오히려 농민들의 지지도 얻고 경제적 이득도 서로 얻는 효과를 얻은 것이다.⁷³⁾ 중국의 경우 모택동 시대에 비해 덩소평 시대에 농민들이 활력을 갖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의 차이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 모택동은 농민들의 사상통제를 우선시한 데 반하여 덩소평은 경제성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농업사유화는 제3세계 국가사회주의에서 가장 자연스런 진화 과정이다. 국가의 정치적 필요를 충족해 주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도 일단 국가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중국에서와 같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농민들이 일탈적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국가 정책 방향을 주도할 것이다. 국가 사회주의의 변화는 단선적이고 완벽한 통제 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의 개혁이 현상을 흔들어 놓으면 그것은 다른 제도를 연쇄적으로 변화시키며, 억압되어 있던 일련의 변화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서 마치 눈사람 굴리기처럼 점점 커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⁷⁴⁾

73) Daniel Kelliher, *Peasant Power in China : The Era of Rural Reform, 1979 ~ 1989*, p. 39.

74) *Ibid.*, pp. 34 ~ 35.

그런데 북한은 농업을 토대로 경제 회생의 추진력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국과의 차이가 될 수 있다. 북한은 IT 산업을 통해서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외화를 조달하려고 한다. 북한의 농민은 계속해서 고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국가사회주의에서의 농민의 위상은 국가가 이념, 정치에 몰두해 있으면 낮을 수밖에 없다. 국가가 경제 발전, 생산성 향상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면 농민들의 협조가 필요해지며 그러면 국가가 농민들에게 의존하게 되어 농민들의 파워 레버리지가 생겨난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아직 이념의 순수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

북한 농민들의 협동농에 대한 비판, 사유화에의 욕구는 최소한 북한 당국이 사상 우선에서 경제우선으로 정책 변화의 물꼬를 터 주어야만 변화의 뇌관으로 폭발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억압되어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북한이 중국 및 베트남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참고문헌

<1차자료>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제2권, 1979년
판(서울 : 돌베개, 1989).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교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김일성, “농촌경리의 금후 발전을 위한 우리당의 정책에 관하여”(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4. 11. 3.), 『김일성
저작집』, 제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농촌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5. 2. 2.), 『김일성저작
집』, 제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로동당중
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5. 4. 1.), 『김일성저작집』,
제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1955.
4.), 『김일성저작집』, 제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전국농업조합대회에서 한 보고, 1959.
1. 5.), 『김일성 저작집』, 제13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3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4. 8. 23.), 『김일성저작집』, 제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정동철, “농업협동화는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향상

시켰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농업협동화운동의 승리』, 제6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조근원, “새날을 위한 애국렬사 가족들의 첫봉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농업협동화운동의 승리』, 제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조선로동당의 농업협동화 정책과 평남도에서의 그의 승리적 실현”, 『력사논문집 - 사회주의 건설 편』(평양 : 과학원출판사, 1960).

<2차자료>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 북한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서울 : 역사비평사, 2000).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 기원과 원인』(서울 : 나남출판, 1996).

북한연구소 편, 『북한민주통일운동사-황해도편』(북한연구소, 1990).

전경수, 『전경수의 베트남일기』(서울 : 통나무, 1993).

강정구, “북한 사회 구조의 개혁”, 강정구 책임편집, 『북한의 사회』(서울 : 을유문화사, 1990).

김남식, “북한의 공산화 과정과 계급노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엮음, 『북한 공산화 과정연구』(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김한주, “인민민주주의와 농업문제 - 동남구라과 제국을 중심으로”, 『경제의 제문제』, 2호(1949)

정순정, “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협동조합운동”, 『소비조합』, 5월호 (1948)

Kelliher, Daniel, *Peasant Power in China: The Era of Rural Reform, 1979-1989*

-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 Scott, James,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Resistance*(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 Viola, Lynne, *Peasant Rebels Under Stalin: Collectivization and the Culture of Peasant Resistanc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The Best Sons of the Fatherland: Workers in the Vanguard of Soviet Collectiviza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Djilas, Milovan, *The New Clas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New York: Praeger Publisher, 1957).
- Fitzpatrick, Shila, *Stalin's Peasants: Resistance & Survival in the Russian Villiage after Collectiviza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Brucan, Silviu, *World Socialism at the Crossroads, An Insider's view*, 이선희 역, 『기रो에 선 사회주의』(서울: 푸른산, 1990).
- Atta, Don, Van, "The USSR as a 'Weak State': Agrarian Origins of Resistance to Perestroika," *World Politics*, vol. XLII, no. 1 (1989).

<Abstract>

Peasants' Social Consciousness after Land Reform and Land Collectivization in North Korea

Suh, Jae Jean(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ocial Science)

This paper analyzes the historical origins of peasants' social consciousness in North Korea. This paper assumes that the current discontent of peasants in North Korea has its pedigree in North Korea's 1946 land reform and 1958 land collectivization. North Korean peasants tend to believe that the land reform measure was an attempt to privatize land ownership, while land collectivization was a means to socialize land ownership by confiscating ownership from the hands of the peasants. Due to Korea's long tradition of private ownership of land and strong history of exploitation by the landlords, North Korean peasants have harbored strong desires for private ownership even until today, and hold strong feelings of discontent toward the current collective farm system.

North Korean peasants vividly remember their resistance to the land collectivization measures during the 1950s and have passed on those memories to the next generation through oral tradition. Peasants' discontent over the

land system and land managerial system—where a large number of cadres form the managerial class that dominates over the peasants—has led to a development of class consciousness within the peasant class. Hatred of the ruling cadre class runs high among the peasants since they regard these cadres as rulers who do nothing. As a response, peasants tend not to work very hard and try to avoid being docile serfs. This has resulted in low farming productivity, and perhaps partly explains why North Korea suffered from a lack of food and massive starvation in the 1990s. If the land ownership system is not changed, and if a system of incentives is not provided to encourage hard work and thereby increase productivity, then North Korea will not be able to recover from its current economic hardship.

Keywords : Peasants' social consciousness, land reform, land collectivization